

SUMMARY

Intro) 서원이란?

- 앞 세대의 훌륭한 유학자를 기리고, 학문을 연구하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

Body) 서원 증가가 낳은 폐단

- 서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변질되어 감
- 존경받는 유학자의 위패의 봉안이 학문적 권위를 의미 ⇒ 세력 대결의 장으로 변모
- 붕당과 맞물리면서 학연을 매개하는 공간으로 부각
- 서원에서 일하면 양역 의무에서 제외 ⇒ 군인 복무와 군포 납부의 의무 면제자 크게 증가
- 서원을 사액하면 토지 3결에 대한 면세권 제공 ⇒ 국가 재정의 악화

Body2) 서원의 폐단에 대한 조치

- 서원의 폐단이 계속되자 국가는 서원 단속을 실시
- 숙종은 나라에 신고하지 않고 사적으로 서원 건립 금지시킴
- 경종은 서원에 딸린 하인제도를 폐지
- 영조는 건립된 서원을 모두 헐어버림

Body3) 서원 철폐 정책 이후 부작용

- 이상의 조치들은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막았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 나라에서 서원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서원은 백성들을 더욱 괴롭힘
- 문제가 생겨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개선하려 한데다 방향까지 잘못 설정한 결과

Outro) 서원 철폐 정책으로 초래된 사태의 시사점

1. 서원 철폐 정책은 서원의 근본정신을 잃고 폐단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고 서원 자체를 제거한 나타한 방식
2. 경영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자회사 혹은 사업부가 이양 받은 권한과 자율성이 변질돼 폐해가 심각해질 때 일방적인 통제 혹은 철수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더욱 큰 부작용 초래 가능하다는 것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이유에 주목하는 것, 그리고 사안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

ISSUE

1. 본문에서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단순히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사안을 단순화해 단일한 해결책을 찾으려 들면 그것을 둘러싼 시스템과 환경이 간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경영학적, 사회적 이슈를 사례로 들어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제거해버린 선례를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 어떠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 토론해보자.
2. 사교육의 과열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에 대한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교육 과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해결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의 철학에 비추어 이 문제를 접근해보자.

정부가 그동안 고교 사교육 경감 대책에는 변죽만 올리는 방안만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6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고등학생 교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4조6520억원이다. 전년(4조3320억원) 대비 32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초등학생(4조7950억원→4조5484억원)과 중학생(4조7678억원→4조3053억원)은 각각 2500억원, 4600억원 가량이 줄었다.

이중 고교생 영어 사교육비 증가가 주목된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 사교육 억제 정책의 하나로 2018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되레 오른 것이다.

지난해 고교생 수가 전년(178만8000명) 대비 3만6000명 줄었는데도, 사교육 참여율이 50.2%에서 52.4%로 상승한 점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안선희 중부대 교수는 "대입 현장은 이미 수시 확대로 내신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사교육이 늘었는데, 교육부는 비중이 줄어든 정시에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해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엉뚱한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과 공교육 강화 방안에 따라 확대된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 등 학생부 전형은 오히려 내신은 물론 비교과 사교육비까지 증가시켜 고교 전체 사교육비를 올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내신·비교과 등 학생부 설계를 위한 컨설팅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한데도,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대입 재정지원정책으로 학생부 전형 확대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도 "고교 내신 등급이 학교 간판을 결정하는 현실이 내신 사교육을 늘리고 사교육비도 증가시켰는데, 교육부 대책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반쪽짜리 대책뿐"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이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을 보면 대부분 엇박자나는 정책뿐"이라며 "예컨대 현재 학원에서 내신·수능에 나오는 EBS 콘텐츠를 토대로 가르쳐서 학생들이 몰리는데 엉뚱하게도 EBS 콘텐츠를 더 강화한다고 하거나, 사교육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국·영·수 등 교과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과 후학교 예체능 모델을 만들어 예체능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대책들"이라고 말했다.

- 정부 고교 사교육 경감 대책, 변죽만 올리고 결국 '무용지물' -
출처 : 뉴스1코리아 2017-03-14